

의안 번호	1656	<b>【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 <b>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8. 31.(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9. 1.(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0. 9. 15.(화)

## 2. 제정이유

- 이사회에 참여제한 등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조항에 대하여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위배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삭제
- 이사회에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이사회에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안 제17조)
  -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어긋나므로 삭제하고자 함.  
(안 제26조제1항)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정비

## 4. 근거법규

- 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제62조(이사회)
- 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근 거 법 규

###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